

한국 자본주의 가치관의 역사적 전통:

조선시대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고찰

김영수*

- I. 들어가는 글
- II. 현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치관
- III.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통
- IV. 개성상인의 자본주의적 의미
- V. 마치는 글

I. 들어가는 글

지난 20세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해방 직후 미화(美貨)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10,000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 등지의 원조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우리의 국제무역은 세계 11위의 교역국가로 부상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1996년에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위태로운 전환기에 처해 있다. 밖으로는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지난 세기동안 힘들게 이룩해온 위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안으로는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자기 몫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노사분규를 포함한 각종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은 제도적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시설의 확대와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보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한편,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국면에서 지금까지의 급속한 성장이 자체 기술력이나 경영혁신에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노동투입량의 증대와 노동집약도의 고도화로써 가능하였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의가 등장하였다(Krugman 1994).¹⁾ 즉 지금까지의 성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과 자원의 활용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경제환경은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자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상품개발력과 사회적 간접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21세기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자체의 사회적 토대와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했던 외형적 경제성장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조명해 봄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의 전통가치관과 문화적 습성에 맞는 고유의 시장경제체제와 접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본주의모형을 찾는 일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의 한국경제가 서구자본주의와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합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는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자본주의모형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 구조적인 면에서는

1) 이에 대한 반론은 "Lessons of Asian Growth"(KIET 1995)를 참조하기 바람.

보다 고속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특혜와 정경유착에 의한 불평등은 경제정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6·29선언 이후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무릇 발전하는 사회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이에 기초한 목표가 있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잘살아 보자’라는 절박한 구호가 모두의 가슴속에 있으면서 사회를 규율하고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 당초에 지녔던 가치관이란 것이 오랫동안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단순한 용어리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용어리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수궁할만한 새로운 가치관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없는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도 지난 1980년대 말부터 가치관의 혼돈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자본주의적 문화기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맹아로 인식될 수 있는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에 나타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전통이 조선시대를 거치며 변화하고 발전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의 시발점을 삼도록 한다.

II. 현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치관

1. 자본주의체제의 고전적 특성

(1) 베버의 고전적 자본주의정신

베버(Weber)는 근대자본주의의 특징을 ‘엄격한 계산에 토대를 둔 합리화’, 또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예측 및 신중함’이라 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일상생활과는 현격히 대조적인 것이며, 수공업자의 특권적 전통주의, 그리고 정치적 기회를 독점하고 비합리적 투기를 지향하는 모험적 자본주의와도 역시 대조된다. 여기서 베버가 자본주의정신이라는 개념 속에 주장하려는 것은 이러한 합리성의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합리성의 윤리적 토대이다. 이러한 토대에 관한 질문은 “자본주의사회의 합리적 사고란 특이한 형태는 어디에서 태어난 지적 산물인가”하는 의문이며, 이를 추구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의 관련성을 밝히게 된다.

베버가 지적인 고전적 자본주의정신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富의 축적을 종교적으로 긍정하거나 최소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이다. 중세기 카톨릭의 경제윤리는 전통적 인문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전통적인 직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치욕이며, 이러한 理財에 대한 거부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삶에 안주하도록 하였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카톨릭의 경제적 전통주의로부터 해방과 새로운 윤리의 체계화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종교개혁은 인간에 대한 교회의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래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그것을 대체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Weber 1958, 20).

자본주의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형성될 때, 돈과 재화의 추구

자체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소유라는 안온함 속에서 무위도식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 때문이었다(Weber 1958, 166-167). 따라서 베버가 일차적으로 강조하였던 富와 자본의 축적에 대한 종교적 용인 및 뒷받침은 세속적인 경제활동의 종교적 추구에 그 본질이 있다. 왜냐하면 부의 축적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들 집단의 행위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활동이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전욕이 곧 자본주의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정신의 특성은 직업정신의 강조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사회윤리로서 '직업에 대한 헌신의 의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누구나 자기의 직업활동을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개신교에서는 장인정신을 넘어서는 천직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의 직업은 일상적 행위 규범의 준수를 통하여 神에 대한 자기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세적인 것을 거부하는 카톨릭의 은둔적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목적추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개신교적 금욕은 세속생활과 단절되는 카톨릭의 금욕생활과는 달리, 방만하고 본능적인 향락에 대한 거부와 함께 세속적인 직장생활 속에서 신앙을 증거 하는 빈틈없고 명철한 의식적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즉 금욕적 생활은 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전체생활을 합리적으로 계획함을 의미한다(Weber 1958, 163). 그러나 신앙이라는 관념적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은 현세적 경제행위의 합리적 수행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속적 금욕은 경제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욕구충족이 아니라 신이 주신 다양한 형태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에서 냉정한 극기심과 엄격한 절제 및 자제를 낳게 하기 때문이다. 즉 내세를 지향하면서도 세속에서 행해지는 생활의 합리화가 곧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요체이며 개신교적인 자본주의정신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정신의 합리성은 개인수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이윤을 사명(직업)으로 여겨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르면 우리가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며, 자기의 자본을 늘리는 일을 자기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개인의 의무이다(Weber 1958, 4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업가는 거대한 부를 소유하면서도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단지 착실히 자기 일을 수행한다는 비합리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Weber 1958, 55). 여기에서 기업의 합리적 조직구성, 즉 합리적 경영에 의한 자본증식과 합리적 자본주의적 노동조직이 가능한 정신적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정신은 富의 축적 및 자본축적에 대한 견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노동력을 조직할 수 있는 생산의 조직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고전적 자본주의체제의 특성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체제는 극히 복잡한 유기적 구조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생산양식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생산자본과 임금노동이 상품교환의 경제방식을 매개로 하여 서로 대립되고 결합되는 사회구성체로 인식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근대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는 그 구성원의 모두가 상품의 소비자로서 서로 일정하게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이다(주종환 1988, 3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은 경제력 밖의 어떠한 형태의 권력개입을 거부하게 되며, 따라서 정권이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흔히 자유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로 통칭되는 18세기 영국에서의 시대이념이 영국의 시장경제질서를 낳게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 자유경쟁과 균등한 기회의 보장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어느 국가나 사회의 특수성을 불문하고 지향해야 할 일은 경제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정의와 공정성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다. 경제정의와 공정성은 각 경제주체가 동등한 교섭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관계에서 정의와 공정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자유경쟁기능은 사회구조 안에서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경제정의와 공정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기능보다 정부개입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경제자유라는 가치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시도이기도 하다.

한편 자유와 공정한 경쟁만을 보장하면 모든 국가, 사회가 발전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많은 논란이 따른다. 하이에크(Hayek)를 비롯한 대다수의 경제사회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유와 경쟁의 신장이 현대의 바람직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Hayek 1935).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경쟁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가 전체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설명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사회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모든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도 있는 반면, 사회구성원의 성격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별국가의 특수한 가치기준과도 연결되어진다.

결국 경쟁의 결과로 인한 승자와 패자들이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승자는 우리 사회에 패자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물질적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승자들의 책임이라는 윤리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패자들은 정당한 경쟁에 의해 패했음을 인정함은 물론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경쟁이 다른 어떤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쟁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모형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각기 다른 사회제충간의 갈등이나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개혁에 의해 경쟁의 틀과 기회를 확대하되 경쟁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의식구조가 필요하게 된다(대한상공회의소 1990, 25).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명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이 제도적 장치는 사회구성원들이 일정한 '사회윤리'를 갖추고 있을 때 자생하고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일정한 제도적 장치는 자유주의적 사회제도를 말하고, 일정한 사회윤리는 독립적인 책임을 의식하고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경쟁규칙이 사회의 규범과 질서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방임주의가 아닌 절제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박순성 1994).

한편, 신제도학파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노스(North)는 17세기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19세기의 미국과 멕시코의 역사를 비교,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양국간의 경제발전의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잘 발전되어온 데 반하여, 스페인과 멕시코는 그렇지 못했다. 노스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좋은 제도란 그 제도를 유지, 운영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러한 제도의 창출에는 그 사회의 규범, 윤리 등 내재적 질서와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North 1990, 131-140).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지탱해주는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경쟁의 개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즉 자유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윤리와 그에 기준한 개인의 가치관을 통한 규범의 확립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의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 역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 부의 축적에 대한 사회적 보장

자본주의의 기본철학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인간활동을 존중하는 도덕성에 있다.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의 절대적인 전제요건인 도덕성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철학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최초의 천민자본주의를 거쳐 근대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서구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청교도사상에서 요구되었던 금욕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는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한 기본가치관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호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제적 소득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활동이 왕성한 사회는 높은 경제성장을 얻게 되고 기업활동이 활발치 못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침체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부존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체를 경영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하려는 기업인들이 없으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급부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제도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

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소유관계를 결성하기 위한 사유권의 사회적 보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Fisher 1923, 27). 재산권제도는 희소성이 있는 경제적 재화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회·경제적으로 제도화된 질서이다. 즉 특정의 경제적 재화에 대한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경제적 재화의 사용수익처분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각종의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질서이며 통제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라면 자유로운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다. 사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및 통신 등 이른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산업의 국유화 및 사회화의 범위와 정도도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은 희소한 재화의 존재로부터 떠오르거나 자원의 사용에 관련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Pejovich 1990, 27). 따라서 재산권제도는 경제적 재화를 둘러싼 일종의 사회적 행위규범이라 할 수 있다(좌승희 1997, 7).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규범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와 인정이 형성되지 않고는 올바른 사회행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서 오는 행위의 아노미현상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

현대자본주의체제는 일반적인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 등 구조적인 면에서 초기의 자본주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기간 중에 나타난 새로운 기술혁신은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여 시장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분업화와 전문화를 촉진하여 의사결정구조의 분산을 이룩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확립을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자본주의의 결과로 발생한 근로계층과 함께, 노동절약적 기술개발로 인한 실업의 증대 및 계층간 소득분포의 격차 등은 정부의 간섭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의 대공황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시장기능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에 회의를 안겨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36년 케인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표방하는 새로운 이론체제인 “일반이론”을 주창하였다. 케인즈는 현실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항상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정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 등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만 현대적 의미의 혼합자본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러시아혁명에 이은 1930년의 대공황은 방만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일정한 수준의 정부개입과 아울러 노동조합의 참여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혼란의 와중에 출현한 나치정부와 그로 인하여 발발한 2차대전 등의 충격 속에 서구자본주의는 수정된 자본주의정신의 수용을 새로이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미국식 자본주의정신의 주된 지향점은 기업가정신과 과학기술의 강조로 요약될 수 있다.

산업혁명의 초기에 번창한 미국의 신흥 산업지도층은 그들이 획득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신들의 우월한 덕행과 능력의 증거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정당화하였다(김경동 1988). 이들은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미천한 계층 출신으로 일찍부터 칼빈주의적 가정교육을 받아 근면, 노력, 근검절약 등의 덕목과 가치들을 익혔던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성공은 주님의 은총이 내린 징조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Bendix 1963).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는 스펜서(Spencer)가 주창한 사회적 진화론이 미국자본주의정신의 새로운 뒷받침이 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스펜서는 누구나 자조정신과 검약, 의무감과 깨끗한 인격의 덕목들을 배양하기만 하면 성공할 희망이 있으

며 시장에서의 경쟁의 대가는 끊임없는 진보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자본주의는 청교도정신에서 비롯한 현세적 금욕주의와 서부개척의 역사가 표방하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기업가의 도전적이고 개척자적 역할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일차대전을 전후로 기업조직이 급격히 거대화, 관료화하면서 경영자의 지배가 산업조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등장하며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Bendix 1963). 이와 함께 노동운동도 조직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그 과정에서 서유럽에서는 상당한 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일어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자본주의체제를 추구하고 답습하는 모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일어나고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획일적인 구도 하에서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혁신적 성격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발생되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점진적 변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효과가 있다는 무조건적이며 무모한 가정은 결코 바람직한 논리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우리로서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사회환경에 맞는 자본주의체제를 확립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III.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통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화적 특성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확산된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더욱 구체적이며 비판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광복 이후에 급속히 이루어진 현대적 사회변동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확산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이처럼 일천한 역사를 가진 근대화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1. 조선 후기 자본주의망아의 발현 과정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으로 피해를 입은 조선의 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17세기 후반기를 한국의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조기준 1994, 289-290). 이 무렵 지방시장이 확대되면서 농촌생산물이 상품화되고 시장 개시일에는 다수의 농민이 시장에 모여들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거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 한편 지방의 행정 도읍 및 物貨流通의 중심지에서는 도시가 발달하고 여기에는 각지로부터 상인이 몰려들어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상업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곳이 각처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漢城을 비롯하여 開城, 義州, 水原, 大邱, 釜山, 濟物浦, 元山, 咸興 등은 이 시기에 이미 대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생산지

로부터 재정수요로 받아들이던 貢納制度를 바꾸어 수요품은 시장에서 구입·충당하게 됨으로써 시장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숙종 이후 鑛貨政策이 적극화됨에 따라 화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까지 침투되어 상거래에서는 화폐가 주요한 매개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원유한 1991, 174). 이와 같이 경제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상업 및 수공업계는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부터 대변혁기를 맞게 되었다.

상공업계의 변혁이란 상업계에서의 봉건적 특권상업이 쇠퇴하면서 私商의 자유로운 상업거래질서가 형성되고 수공업계에서는 전업적인 민간수공업이 발달하는 한편 농촌의 부업적 수공업도 다양화하고, 생산물의 종류 및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일부 수공업 분야에서는 대량생산체제인 분업을 기초로 한 공장제수공업도 움터나게 된 것을 말한다. 18세기 후기에 들어와 상업 및 수공업도 주요한 가치증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조기준 1994, 301-305; 유원동 1991, 110-114).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에 의한 자본이 축적되면서 재화의 표시도 토지로부터 화폐로 옮겨졌다. 18-19세기 상공업 자본의 축적과정은 과거의 市廛商人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六矣廛을 비롯한 特權市廛商人들은 특정지역과 특정업종의 去來獨占權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이 특권 상거래에 의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으나, 18-19세기의 私營상공업자들은 자유로운 상거래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상공업자 중에는 巨商들의 도매행위로 유통계에 나돈 物貨를 독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유통계를 혼란에 빠뜨린 일도 있었으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따른 것이었고, 官府와 결탁한 '권력형 독점'은 아니었다.

수공업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공업자들은 시장에서의 수요에 따라 생산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상품의 질은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량을 도모하면서 날로 증대해 가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조직을 개편하여 분업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다. 일부 산업분야에서 공장제수공업이 태동된 것도 이러한 여건에서 나온 것이다.

상공인의 자본축적과 더불어 그들의 사회경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전통적 사회 신분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상공업에서의 자본축적은 정부의 세수증대의 세원이 되고 있었으므로 정부로서도 이 상공업의 발전을 가법게 볼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그들 중에는 관계에 등용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조기준 1991, 40; 1994, 290-292; 강만길 1973, 14). 이러한 양반들 중에는 적으나마 신분적인 굴레를 벗어나고 상공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식과 능력을 갖춘 양반계층의 상공업계 진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19세기 한국의 상공업에서 절대적으로 요망되던 경영상의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래 상공업계에서 움터 나와 성장하고 있던 자유의 기풍은 18세기 말기에 들어와서는 이미 억제할 수 없는 사회풍조로 성숙되고 있었다(강만길 1973, 14-23). 그리하여 正祖 15년(1791년) 1월에 정부는 漢城 내의 상거래에서는 정부의 國役을 담당하면서 정부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전통적 六矣廬의 특권만 존속시키고 그 밖의 모든 군소 시전의 禁亂廬權 행사는 금하는 한편 한성 내의 상거래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通共和賣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통공정책은 비록 육의전의 특권은 예외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전통적 특권상업질서의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자유상업의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 후기 상업활동의 활성화와 개성상인

그러나 18세기 이후 나타나던 자본주의적 맹아는 그후 더 이상 피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한국경제사학계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의 기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의 발전방향이 근대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으나 특히 정부의 재정

정책과 무역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부의 재정정책으로서는 이 시기에 租稅金納化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며, 그것은 또 지주에 대한 地代金納化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었고 결국 농촌경제의 근대적 발전을 지연시키게 되었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규제가 지속되어 物貨의 국제적 교류가 저해 받았고 그것은 국내시장의 수요를 확대시키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생산업이 활성화 할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이다. 19세기 초 이래 서구 상선의 내항시기에 정부가 쇄국정책을 견지한 것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한국사회의 경직화를 초래했다.

(1) 개성상인의 출현과 그들의 상업활동

開城에 본격적인 상업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당시의 전형적 상가형태인 市廛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高麗太祖 王建이 그곳을 首都로 정하고 도시건설을 할 때부터였다. 고려 태조는 즉위한 다음해인 919년에 개성을 수도로 정하고 종묘사직을 造營함과 더불어 市廛公廊을 건립하고 상인을 불러 들여 상인 거리인 坊과 일반인의 주거지역인 里를 구획하였다(조기준 1994, 135-137; 강만길 1973, 98-99). 태조가 수도를 정함과 동시에 시전공랑을 건립한 것은, 수도에는 막대한 물자가 集積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물자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 때문이다. 수도에서는 농민으로부터의 朝穀과 貢品이 제작, 貢納되는 곳이며 수도 및 그 주변에 건설된 官營手工業場에서도 각종 물품이 제작, 공납되었다.

이러한 물자는 현물로서 국고에 수납되며 왕실 귀족에게는 그들의 嗜好와는 관계없이 俸祿으로서 지급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용도에 支辨하고 잔여물은 처분하여야 하며 왕실, 귀족, 관료들은 지급 받은 물품을 그들의 기호에 따라 교환하여야 했다. 시전은 이러한 현실적인 요청

에 의하여 국가에서 건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전공랑은 국가의 건물이며, 상인은 국가로부터 공랑을 대여 받고 공랑세를 납부하였으며, 首都의 일반 상거래를 담당하는 한편 국가 보유물자를 처분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는 특권상인의 지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설치 당초의 개성시전의 규모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13세기 초에 개성의 시전을 개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것에 의하면 光化門에서 十字路에 이르는 도로의 양옆에 1000여 개의 상점이 밀집된 큰 상가가 이루어졌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京市廳의 발달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상거래 촉진책의 각종 요인에 자극 받은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官營手工業외에 민간에 의한 私營手工業者가 다수 등장하여 이들의 제작품은 시전을 통하여 판매되었고 대외무역에 의하여 유입된 외래상품은 수도에서 활발하게 교환되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성이 오랜 기간을 통하여 상업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까지에는 크게 자연적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첫째, 지리적으로 개성은 漢城과 가까우면서 서쪽으로 중국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 중국무역의 중심지로서 개발되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성은 중국의 物産이 서울로 유입되는 길목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업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왕조 건국 후 개성인들이 새로운 왕조의 등장에 불복하였으므로 정부에서도 이들을 登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곳 士大夫의 후예들이 학문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조기준 1994, 136). 前王朝의 遺民으로서 조선왕조와 타협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지식인들이 상업으로 轉業하자 당시 사회상황으로 미루어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갖춘 商人群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상술이 뛰어나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게 되었다(유봉화 1993).

이와 함께, 개성인들은 고려시대를 통하여 활발히 해외무역을 벌였던 고려상인들이 개성상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 또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이다. 특히 조선시대 전반을 통하여 끊이지 않던 쇄국정책 때문에 민간인들의 사사로운 해외무역이 매우 미미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의 상업계를 장악하는 개성상인의 출현을 돕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개성상인의 위치는 서울상인의 위치와 자웅을 가릴 수 없는 막강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의 초기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신일행이 무역목적으로 가져오는 물품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면 대개 일차적으로 漢城과 開城의 상인이 이를 매수하게 하였고, 그래도 남으면 전국 각지방의 상인을 통하여 교역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개성상인의 위치는 조선왕조의 후기로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고해져서 개성은 실제로 전국 제일의 상업도시로 발전해 갔다. 자연히 조선왕조는 개성에 대하여 타지방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공물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무겁게 하는 한편 상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참작하여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常例化 되었다. 이는 특히 서울시전 및 개성시전과 함께 개성의 行商人에 대해서도 官府가 그 자금을 대부하여 주는 등으로 발전하였다.

(2) 조선 후기 개성상인과 정부의 관계

조선 후기 개성의 市廛들도 당시의 정부와의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서울의 六矣廛이 정부에 일정한 부담을 지고 대신 禁亂廛權과 같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었으나, 개성을 기반으로 한 상인들도 이와 비슷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여러 곳의 문헌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의 육의전과 같이 개성에서도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던 私商都賣가 성장하여 시

전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전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이들의 고발로 인하여 사상도고를 하던 상인들이 처벌을 받은 기록이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시전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금난전권은 조선 후기에도 강하게 보호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정부가 개성상인들을 위해서 행정적 특례를 전용시킨 한 예로서 금난전권과 함께 군인의 습조(習操)문제를 들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홍작 등을 이유로 봄가을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습조를 흔히 중지하거나 혹은 농번기를 피한 우기에 한 번만 실시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개성의 경우는 그곳 주민이 상인이 많고 이들의 상업활동에 지장이 있다하여 년 1회만 실시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강만길 1973, 107). 개성상인에 대한 官府의 公金貸付도 비교적 대규모였다. 1740년(英祖 16년)에는 왕이 개성에 行幸할 것에 대비하여 좌의정이 명하여 정부에서 행행비용을 보조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후로 개성상인에 대한 관부의 資金貸付는 항구적인 것이 되어서 1794년(正祖 18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하면 당시 개성상인에 대한 관부의 전체 貸付額이 30만냥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정부의 특혜와 함께 여러 가지 유리한 상업여건을 갖춘 개성상인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또 조직화되어 갔다. 개성상인들은 일찍이 지금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의 都家제도를 만들어 상호친목과 권익 보호는 물론 상권의 개발에 앞장섰다. 또한 개성의 富商들은 그들의 대리인적인 差人을 전국 지방의 상업중심지에 파견하여 그곳에 흔히 松房으로 불리는 일종의 지점을 차려 놓고 그 지방의 생산품을 買占하거나 또 타지방 산품을 그곳에 옮겨 판매하였다(김방희 1996; 강만길 1973, 108).

그러나 이러한 차인과 송방제도는 현대의 대리인이나 대리인과는 근본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특별한 자본이 없는 개성사람들이 전주(錢主)에게 돈을 빌려 지방에 내려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조합의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도적 전통은 최근까지도 전수되어 광복 후에 개성상인들 가운데 누가 가게를 열면 開城富商들이 모두가 자본을 대주는 合資形態의 상점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개성상인들은 그 원류를 고려시대로부터 찾을 수 있는 개성상인들의 독특한 부기방식인 松都四介治簿法을 개발하여 초기자본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사개는 나무가 네 갈래로 들쭉날쭉 파여 서로 꼭 물리게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개치부는 네 개의 장부에 기록된 계정과목이 맞물려 아귀가 꼭 맞는 장부 기록법인 셈이다. 네 개의 장부는 매일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는 일기장과 거래상대자별로 거래를 모아두는 장책, 결산을 위한 장부이다(윤근호 1984).

사개치부법의 기원에 관하여는 그 발생 당시의 기록이나 장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고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종의 문헌과 개성 사람들의 구전, 그리고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기반을 고찰함으로써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사개치부법의 기원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그 전성시대에 왕실, 귀족, 부상들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식부기는 괴테(Goethe)가 말하였듯이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이고, 그의 원리는 유클리드(Euclid)의 比의 원리에 겨룰 수 있는 절대적 완전원리라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복식부기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13~14세기에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발생,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개치부법이 서양의 것에 손색이 없는 복식부기로서 고려 전성시대(1010-1274)에 발생하였다고 하면 서양의 것보다 약 200년 앞서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복식부기의 嚆矢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성이 되고, 세계 복식부기의 역사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윤근호

1984, 2-3).

사개치부법에서는 재물의 거래는 그 소유자나 기록의 담당자로 보서는 객관적인 재물의 이동이고 변화로서, 그 기록도 객관적인 사실 그 대로의 기록이 된다. 즉 漢文에 의하여 敘述的文章으로 기록하되, 대립되는 당사자를 각각 主語로 하고 주어지고 받아지는 사실을 動詞로 하여, 주어지고 받아지는 물화와 자금을 目的語로 기술한다. 한편 사개치부법으로 작성된 장부들은 거래의 종류와 완결 여부에 따라 사개치부 특유의 문자와 부호들이 쓰여졌다(윤근호 1984, 15-16).²⁾

(3)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상업활동을 벌이고 있던 개성상인이었으므로 그들이 국내상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였지만, 특히 그들에게 큰 실리를 주고 자본의 집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人蔘과 布物 등이었다. 인삼은 대개 18세기 이전까지는 自然蔘이었고 그 이후는 栽培蔘이었지만, 어느 경우이건 국내외 상업계의 가장 주요한 상품의 하나였고 대부분의 개성상인은 가장 대규모적인 蔘商이었다. 또한 인삼은 국내수요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지로의 중요한 수출품이었으므로, 정부는 그 私賣買를 강력히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개성상인들은 인삼의 私商에 적극 참여하였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資本蓄積의 호기로 삼았다(오성 1992; 1995, 8-9).

개성상인의 인삼상업은 密商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중반부터 현재의 專賣權과 유사한 제도인 八包蔘權도 개성상인이 장악

2) 이러한 사개치부법은 대략 1920년대까지 사용, 존속되었고 舊韓末의 일본제국주의의 침입으로 말미암은 서양식 부기의 도입으로 차차 실무에서 驅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거의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사개치부는 상업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의 초창기 거래장부를 들 수 있다. 1899년 설립된 이 은행은 초기 대주주였던 개성상인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사개치부법을 사용해 장부를 작성하였으나, 일본 통감부의 압력으로 1906년부터 서양식 복식부기로 바꾸었다. 당시의 장부는 현재 상업은행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하여 타지방 상인, 특히 서울상인들이 인삼의 유통에 끼여드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공식적인 독점상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오성 1995, 19-23).

한편 이 시기 국내의 최대생산품이었던 布物은 개성상인의 都家商業에서 또 다른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개성상인의 도가상업은 대개 19 세기에 접어들면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市廳의 禁亂廳權이 해소되어 가는 반면 私商人의 都賈商業이 발전해 가던 때이며, 그 핵심을 이룬 상품이 포물이었다. 개성상인의 포물교역은 그들의 松房組織을 바탕으로 주로 咸鏡道와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西川, 廣州 등 경기지방은 물론 멀리 경주지방까지도 그 교역범위에 둔 전국적인 활동이었다.

이렇게 국내를 위주로 한 상업활동과 함께 외국무역을 통한 자본의 집적 또한 개성상인의 특성으로 기술되어질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개성상인의 상행위에는 해외무역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민간인의 해외무역을 성행하였고 자연히 개성상인이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민간인의 해외무역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외국과의 교역도 明나라와의 朝貢貿易과 일본과의 倭關貿易 등 일종의 官貿易에 한정되어 있었다.

IV. 개성상인의 자본주의적 의미

1. 조선 후기 개성지역 상업활동의 경제사적 의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은 비록 그 초창기에는 官府와의 관계에서 시발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타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히 앞선 시점에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에 대한 식견과 그에 기초한 실질적인 활동들은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사농공상의 엄격한 사회신분제도가 확립되어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들의 상업활동 참여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제약받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록 그 동기가 관제로의 진출이 근원적으로 막혀있었다는 정치적 이유에서이기는 하나 이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자본주의적 제도의 창출과 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史的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은 禁亂市權 등의 특권적 경제제도에 바탕을 두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의 發現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特權市廳의 시장독점 및 군소 상인의 상거래를 금지하는 금난전권의 행사는 시장원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시켰다. 그들의 금난전권 행위는 한성과 개성을 포함한 여러 대도시의 物貨流通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상거래는 위축되고 물가가 등귀하여 소비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特權市廳들이 私商들의 상품을 몰수하는 행위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특권시전의 금난전권을 빙자하여 권력과 결탁하는 무뢰한들이 새로 시전을 개설하고 금난전권을 행사하면서 군소 상인들이 거래를 덮치어 물품을 몰수하는 일에 더 열중한 시전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된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물론 이 시기를 통하여 市廳과 亂廳과의 갈등관계에서 시전이 받게 된 피해도 적지 않았다. 특권시전이 금난전권을 행사하면서 난전들의 상행위를 억제하고는 있었으나 대도시에서의 소비수요 증대는 군소 상인들의 진출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非市廳系의 군소 상인들은 처음에는 시전상인들의 특권지역 밖에서 상

업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점차 금지된 영역 내로 몰려들어 왔고 그들 중에는 巨商들의 代理商들도 있어 이들은 도시로 유입되는 物貨를 독점하고 시전상인들에게 물화를 보내지 않고 散賣하는 자들도 있어 시전상인들은 물품구입의 통로를 차단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城과 開城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私商들의 상행위는 官主導의 상업활동에서 독자적인 자유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전국 각지에 산재한 개성상인들의 대리점의 성격을 띠었던 松房과 대리인의 성격을 가졌던 差人을 통한 先貸資本의 발달은 상인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생산물은 先占·買入하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상업자본의 생산지배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의 단면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先貸資本이 발생하는 경제적 배경은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물 공급이 따르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상업자본이 축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공업 부분에서는 자본의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순조롭지 못한 시기에 상인들이 수공업자에게 자금을 선대하고 생산시설, 원료구입 및 공장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그 생산물을 선점·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대자본은 고율 소득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일찍부터 전래되던 高利貸資本과 다를 바 없으나 그 역사적 기능과 의의는 같지 않다. 고리대자본은 자금자족 경제가 지배하는 농업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고대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대자본은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농촌생산물이 상품화하는 동시에 또 민간 私營手工業 제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때에, 상업이 자본을 선대하고 그 생산물을 선점하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선대자본은 상업자본의 축적에 비례하여 수공업자의 자금축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선대자본이 발생하는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부터였으니 이 자본이 우리 경제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행하는 것은 그

말엽 이후였다(조기준 1994, 299-301).

이상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개성상인의 활발한 상업활동은 한국의 경제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아울러 순수한 상업활동의 측면만을 논함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더욱 활발한 활동이 漢城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상거래가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그 史的 중요성과 의의에 관하여 크게 다름이 없었음 또한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의 개성지역은 그 시대적 사회경제상황 아래서 발달된 하나의 특수한 지역경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전래되어 회자되고 있는 개성상인과 이 지역의 독특한 상업활동은 그 사회적 역할과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그 의의가 더욱 커진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과 그로 인하여 派生된 이들의 제도적 副産物이 조선시대 상업활동에 미친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2. 조선 후기 개성지역 상업활동의 사회사적 의의

개성지역의 상업지향적 분위기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그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논의되었다. 이와 아울러 조선시대,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발현되기 시작한 초기 자본주의적 성격은 단지 그 밀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여타의 대도시와 비교하여 상이한 점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이미 논술한 바와 같다.

이와는 달리 지난 날 개성지역에서 이루어진 상업활동의 그 역사적·경제적 의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함으로써 더욱 그 뜻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개성상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문화적 특성은 크게 근면·저축·검소·협조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이대욱 1984). 이러한 정신적 有志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 지역에 터를 잡게되는 개성상인들이 지난날 개성지역에서

의 상업활동을 그대로 전수하여 계승시킴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성상인들이 상업과 금융에 두각을 나타내게 된 데는 차인제도라는 개성상인 특유의 상관행도 크게 기여했다.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했던 조선 후기의 교통 통신망은 타지역 부상들이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국한된 모습을 보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사개치부법을 통한 복식부기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야 정부의 권장과 교육으로 여타 지역에 通用되기 시작한 회계기록법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뛰어 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문적인 경영법에 의한 巨商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개성지역의 상업행위가 오늘날까지 한국적 자본주의의 전통적 표상인 것처럼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외국자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개성의 상업지향적 분위기는 일제시대가 되었다하여 특별하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일제시대에 들어오며 민족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체의식은 외세의 침략과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침투를 맞아 더욱 활성화 되고 공고해졌다 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 건국 후 정치적 진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껴온 개성상인들이었지만, 일제라는 새로운 식민통치가 들어섰다 해서 갑자기 정치적 진출에 관심이 높아졌다거나 정치 지향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오성 1994, 1730-1731). 오히려 타지역과 비교하여 외국자본, 특히 일본자본에 대한 지극한 배타심과 배척의지는 이러한 자본에 바탕을 둔 상업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 지역의 독특한 정서는 일제시대에 발간된 많은 문헌을 통하여 개성에서는 그 市街의 상점이 대개 조선인의 상점이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성지역의 상업지향적 분위기는 일제의 식민통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이러한 지역정서가 현대적 생산구조나 경영구조와 비교하여 개성상인들이 근대적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형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발전된 자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나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를 통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를 대변하는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 사회적·정신적 문화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훗날 남한에 일군 개성 상인의 기업들 대부분이 남의 빛에 의존하지 않아 負債比率이 높지 않고 한 가지 업종에만 전문화한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의의와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 또한 위축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VI. 마치는 글

한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개인의 활동을 존중하는 높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높은 수준의 저축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야 할 전통문화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 서구자본주의가 오랫동안 가꾸어져 온 우리의 귀중한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백년을 전해 내려온 개성상인의 정신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이어나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정신적 支柱로 활용될 수 있겠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본철학은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인간활동을 존중하는 도덕성에 있다. 자유경쟁에 절대적인 전제조건인 도덕성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두는 가치관인 것이다. 약육강식의 철학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최초의 천민자본주의를 거쳐 근대자본주의로 넘어오며 서구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청교도 사상에서 요구되었던 금욕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는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한 기본가치관으로 남아있다.

막스베버(Max Weber)는 서구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개념을 프로테스탄티즘에 두고 있다(Weber 1958). 이러한 그의 주장은 경제적논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절제와 금욕만을 요구하던 중세의 구도주의적 가치관과 종교관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이 개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개성상인의 사례를 통하여 본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적 관점, 특히 그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현실참여와 상당부분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적인 현실참여의 기회가 원천봉쇄당 하던 조선왕조의 초기부터 개성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고려왕조의 엘리트군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은 이미 전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다. 물론 그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 현실성이 조선왕조를 거치며 사농공상의 신분적 구분에 기초를 둔 사회활동의 근본적 구분을 강조한 유교적 전통의 팽배로 인하여 많이 희석되어졌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 정신문화에서 적극적인 경제활

동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부인되었고 단정 할 수 없겠다. 이는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 초기의 경제활동이 단순한 상인계급의 참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이 마치 서구에서 발달한 천민자본주의의 한 단면인 양 치부되어지는 것과 연계하여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논의는 조선 후기로 내려오며 실학파의 중심적인 논점으로 발전되었다. 퇴계와 율곡을 거쳐 다산으로 이어지는 실학사상에서 당시 지배계급의 비현실적 사회참여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는 그 주장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하고 일관적인 흐름이었다.

한편 비록 명문화된 규약이나 규율로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더라도, 개성상인들의 도덕적 상업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내부적 신조로서 지켜지던 근면·저축·검소·협조의 네 가지 덕목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하여야 할 윤리적 규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은 경제활동의 축을 이루는 생산자(또는 기업)와 소비자의 입장에 共に 적용되어야 할 전통적 정신문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업문화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기업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하며 17세기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거치며 생성되었다. 특히 산업혁명을 계기로 신흥상인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세봉건사회의 신분사회가 붕괴됨으로써 그 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서구사회의 기업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기업이 속한 사회의 성격 안에서 生成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의 생성과정이 극히 비정상적이었던 한국에서의 기업과 기업문화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복잡한 역사와 계속되어 온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천과정 속에서 그 제도적 틀을 이뤄왔다. 근면·저축·검소·협조 등의 네 가지에 바탕을 둔 우리의 전통적 상인문화는 19세기에 후반으로 넘어오며 식민주의적 근대화가 강요되면서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무분별한 물신주의(物神主義, fetishism)에 바탕을 둔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탄생시킨 시간과 공간의 환경, 즉 역사발전과정과 사회적 구조가 서양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즉 기업이 처한 사회적 문화와 그 기업 스스로의 내외적인 문화가 유리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편 소비자로 대변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은 사회적 불신풍조와 시민윤리의 실종을 가져왔고 합리적 경제원칙에 입각한 직업정신과 규칙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풍조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와 경제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신뢰감을 회복하고 협력과 화합을 진작시키며 사회적 동질성의 함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구성원간에 일체감을 조장하고 민족자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 개성지역의 경제의식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오랜 기간을 통해 개성상인과 그들의 상업활동은 비록 본격적인 자본주의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이에대한 기본적인 사회인식을 마련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源流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제·사회적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만길. 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경동. 1988. 『노사관계의 사회학』, 경문사
- 김방희. 1996. “開城商人 精神으로 經濟難 渡자.” 『時事저널』, 10, 3.
- 대한상공회의소. 1990. 『한국자본주의 현상과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 박순성. 1994. 『자유시장경제와 제도, 국가 : 아담 스미스의 사회사상에서의 경제, 정치, 도덕』, 서울 Mimeograph.
- 오 성. 1992.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삼상의 활동.” 『세종사학』 1.
- 오 성. 1994. “韓末 開城地方의 戶의 構成實態.” 『省谷論叢』 23.
- 오 성. 1995. 『조선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 원유한. 1991. “조선후기의 화폐경제발달과 그 영향.”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 유봉하. 1993. “朝鮮後期 開城知識人의 動向과 北學思想 受容 : 최한기와 김택영을 중심으로.” 『奎章閣』 16.
- 유원동. 1991.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현황.”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입문』, 민족문화사.
- 윤근호. 1984. 『韓國會計史研究』, 韓國研究院.
- 이대옥. 1984. “開城商人 精神 繼承한 松商의 後裔 企業人들.” 『月刊同化』.
- 조기준. 1991.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현황.”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 조기준. 1994. 『한국경제사신강』, 일신사.
- 좌승희. 1997. 『한국의 재산권 제도와 산업조직 : 경제제도 개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 주종환. 1988. 『한국자본주의사론』, 한울
- 최병무. 1957. “李朝時期的 市廛.” 『역사과학』 1.
- Bendix, R. 1963, *Work and Authority in Industry*, New York : Harper.
- Fisher, I. 1923, *Elementary of Economics*, New York : Macmillan.
- Hayek, F. 1935, “The State of Debates,” reprinted in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Indiana : Gateway Editions, Ltd. 1948.
- KIET. 1995, *Lessons of Asian Growth*, Seoul : KIET.
- Krugman, P.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North, D. 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jovich, S. 1990. *Th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Weber, Marx. 1958.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